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정재현



정부가 41개 공기업에 대한 1단계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공기업 개혁방안에 대한 여론은 비판적이다. 요란한 걸포장에 비해 알맹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공기업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 살리기 정책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선진화 방안이 됐든 개혁이 됐든 공기업 개편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함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했다. 아쉽게도 이번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안은 이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조급하게 이뤄졌다는 흔적이 엿보인다.

공문화 충분히 거쳐야

우선 공기업 개혁의 핵심인 민영화 계획이 부실하게 짠 것이다. 당초 40~50여 개 공기업이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던 것에서 크게 후퇴했을 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대형 공기업은 모두 빠지고, 이렇듯 들어본 적 없는 공기업이 숫자 채우기를 위해 동원된 인상을 지을 수 없다. 공공부문 개혁은 방만한 경영을 바로

잡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당연하다. 그래서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도 공기업 개혁을 시도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공기업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서 “공기업이 감시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려면

와 견제 부족으로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질타하고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설립 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권 출범과 함께 공기업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이 성공하려면 공문화를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방안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추진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공기업 개혁은 서두름만 있다.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무차별적인 민영화를

추진했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추진동력이 크게 떨어진 게 사실이다.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정부의 조급증이 부른 당연한 결과다. 민영화 지상주의도 문제다. 시장 독점이 우려되거나 경영 효율성보다는 공익성이 중시되는 부분에서는 공기업 형태를 따는 것이 당연하다.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는 신중해야 한다. 민영화하면 공기업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자칫 국민 부담을 늘리고 시장 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민영화와 공

업 선진화의 전부는 아닌 것이다. 노조 등 공기업 당사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조직 이기주의에 휘둘러서는 절대 안 되지만 인력 구조조정을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 개혁 당사자들의 협력을 끌어내지 못하고서는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기 때문이다.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다. 능력 있고 전문성을 갖춘 최고경영자(CEO)를 선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난 수 개월 동안 무분별한 낙하산 인사를 자행했다. 공기업

시장과 감사 자리에 한나라당 공천 낙하산자 및 출신 자경계 주기와 지역 편중, 갖가지 인연에 얽힌 사적(私的) 인사로 공기업 선진화, 공기업 민영화의 명분을 떨어뜨렸다. 낙하산 인사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공기업 개혁의 취지가 벌써 퇴색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 방안이 나오겠는가.

혁신도시 연계 안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기업 개혁이 혁신도시 후퇴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혁신도시 건설은 그 성격이나 의미가 전혀 다르다. 혁신도시 건설이 공기업 개혁으로 인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공기업 개혁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에 앞설 수는 없다. 다행히 이번 1단계 선진화 방안에는 공기업 민영화에 의한 혁신도시 차질은 없어보이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아직도 정부 주변에서는 ‘선 민영화 후 혁신도시 건설’ 주장이 여전히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차체에 공기업 개혁과 혁신도시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만큼은 공기업 개혁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정부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절차와 과정에서의 투명성, 공정한 인사로 성공의 지름길을 알아야 할 것이다. <편집부국장 jhjung@

시설

D-23 광주비엔날레 준비 이상은 없다

광주비엔날레가 23일 앞으로 다가왔다. 제 7회 광주비엔날레는 다음달 5일 개막돼 66일간 광주 전역에서 미술의 대향연을 벌이게 된다. 광주비엔날레의 성공 여부는 남은 기간의 준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오쿠이 엔취저 감독 등 광주비엔날레 관계자들은 준비에 한창이다. 전시관 공사가 마무리되고 대형 설치 작품들이 반입돼 오는 15일부터 본격적인 설치작업에 들어간다. 이미 문을 연 홍보관에 서는 비엔날레 홍보 영상물 상영과 전시작품 등을 통해 비엔날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7회째를 맞으면서 대회마다 100만 명 이상이 관람하는 우리나라 대표적 미술행사로서의 위상을 굳혔지만 외국인 인은 많지 않다. 6회 대회까지 외국인 관람객 비율이 평균 3.3%에 불과해 국제행사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후발주자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광주비엔날레와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 권에서만 요코하마트리엔날레, 상하이 비엔날레, 싱가포르비엔날레 등 7개의 국제미술행사가 열린다. 도시마다 특성을 내세워 외국 관람객을 상대로 ‘비엔날레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광주의 여건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 상하이, 싱가포르, 요코하마는 물론 부산 등에 비해서도 인지도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광주비엔날레가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해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방잔치’로 전락할 수 있다. 광주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인 텔러트 최수종씨는 최근 위촉사에서 “광주 비엔날레가 아시아 최고의 비엔날레, 세계에서 10위권의 비엔날레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의 덕담이 ‘희망사항’에 그쳐서는 안된다. 광주비엔날레가 명실상부한 국제비엔날레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광주 시민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허점 투성이’ 광주 일선 학교 학사행정

광주시내 일부 학교들이 3년간 똑같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이월금을 교직원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학사운영과 회계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올 상반기 380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업무 부당 처리 사례 190건을 적발하고 교직원 281명에게 경고 등 처분을 내렸다. 한 고등학교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기고사 1학년 과학 18문항 중 10개, 2학년 체육 20문항 중 19개나 전년도 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했다. 꼭 알아야 할 내용이라면 유형을 바꾸거나 보기 혹은 지문을 변형해서 출제하는 것이 상식인데, 토씨까지 똑같이 베껴 냈더니 그 배짱이 놀랍다. B기관은 규정에도 없는 교육감상을 매년 40명의 학생들에게 남발했다. 이월금을 교직원 회식비로 지출하거나 수월금에 회식비로 지출하거나 수월금에 학여영 위탁업체 및 급식업체 선정과 실습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회계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 등 편법을 동원한 사례도 많았다. 상당수 학교는 운영계획을 세울 때 교육과정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교장 20명은 교육장의 허가도 없이 많게는 7차례나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다. 교장과 교사 스스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이번에 적발된 교직원들은 교단을 곳곳이 지키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에 비하면 극소수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보면 교단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광주시교육청이 보다 전문적인 분야별 감사로 교단의 불·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감사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교사 업무 지원 등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직원들이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기고



박덕양

세계 204개국 선수단이 참가하는 지구촌 스포츠 축제 베이징 올림픽이 지난 8일 개막됐다. 이번 올림픽은 역대 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국가원수가 참가해 베이징은 온통 특급 VIP들에 대한 의전으로 분주했다. 국가원수들은 자국 선수단이 벌이는 경기를 참관하며 응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9일 오후 베이징 국가 올림픽체육센터에서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신화의 재연을 노리는 한국 여자 핸드볼 첫 경기 러시아전

하는 것은 ‘매우 격렬한 응원’으로 간주된다. 국가원수급의 응원이 자제를 요청받는 이유는 자국의 선수만을 응원하다 보면 외교적 결례를 범하게 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요, 글로벌 스포츠 정신에 입각해 볼 때 객관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기장 물이나 법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로얄박스에 모든 선수들을 격려하고 파인 플레이를 주문하는 입장에서 조용히 관전을 하는 게 통례

국가원수의 스포츠 응원 매너

를 관망하며 응원했다. 하지만 잘못된 태극기를 흔들며 열심(?) 응원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고 말았다.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엉터리 태극기를 흔들었다는 작은 실수가 아니라 국가원수가 국제경기에서 자국 선수를 열심히 응원하는 행위 그 자체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스포츠 시합에서 국가원수, IOC위원, NOC위원 및 의전실원을 통해 경기장에 입장하는 귀빈(VIP)들은 로얄박스에 착석하게 되고 이들은 대체적으로 자국의 선수를 격렬하게 응원하지 않는 것이 스포츠 의전의 통례다. 로얄박스에 앉은 인물이 자국 국기를 흔들며 연호를

다. 필자도 지난 토리노 동계올림픽과 도하 아시안게임 때 로얄박스에 앉아 관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리 경기가 격렬해지고 손에 땀을 쥐는 승부가 벌어진다고 해도 로얄박스의 귀빈들은 느린 박수를 치거나 낮은 탄성을 내뿜는 정도이지 그 이상의 큰 동작은 삼간다. 이번 이 대통령이 로얄박스에서 영부인과 같이 일어나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는 만족감을 줬을지는 모르지만 국제적 스포츠 의전에는 벗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짚어두고 싶다. <전 KOC 국제관계특별위원>

어린이 비만 치료 건강보험 적용해야

아이들이 갈수록 뚱뚱해지고 있다. 빵·피자·햄버거·치킨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는 데다 아이들 먹거리를 쟁여야 하는 엄마를 또한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시간이 여의지 않아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연구기관 조사에 의하면 소아 비만 어린이의 3분의 2가량은 고혈압 같은 성인병 증상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린이 비만 치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린이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비만이 심해지면 지방간 수치가 높아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한다. 체중이 많이 나가 지방간을 앓을 경우 당연히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의 전단계라 불리는 대사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소아비만은 지방세포의 크기만 커지는 성인 비만과 달리 지방세포의 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고도비만으로 이어지기 쉬운 특징이 있다. 그래서 성인병으로 알려진

대사증후군들이 조기에 발병하고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어린이 비만은 성인 비만보다 더 위험하다고 한다. 하지만, 살을 빼는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등 사회적 지원은 거의 없는 게 문제다. 비만정도가 심한 걸 의학적으로 증명할 경우 어린이 비만에 대해서는 살을 빼는 노력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해줘야 한다. 소아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비만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아이의 비만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해 건강 방치하게 된다. 어린이 비만이 성인 비만과 질병으로 이어질 경우 그에 따른 치료비와 사회적 손실 비용은 어릴 때 비만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사용되는 재원보다 몇 배 더 들어간다는 것을 의료보건 담당자들은 알아야 한다. ▲이조아·광주시 광산구 송치동

은펜칼럼



송민석

금년에는 폭염보다 갈등과 반목이 유난스럽게도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논쟁과 PD수첩 진실게임이 그렇고,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 미국의 행태가 그렇고, 금강산 사건과 북한의 처신이 그렇다. 그 중에서도 화두는 ‘촛불’로 집약된다. 인터넷시대가 되면서 여럿이 모여의 사교환을 하던 것이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의사교환을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인터넷과 광장이 결합된 새 소통장치를 ‘촛불집회’가 등장한 것이다. 촛불정국의 이면에는 대통령과 국민이 지향하는 가치의 충돌이 깔려있다. 그것은 70년대식 가치와 21세기적 가치

가하는 데도 백화점의 명품 매출은 40%나 늘었다고 한다. 가난이 불행은 아니듯이 명품을 돌렸다고 꼭 행복할 것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심각한 양극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분배보다는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서울 중심적 사고와 부자 중심의 정책으로 비치는 대기업 친화적 정책도 자칫하면 서민과는 다른 특별한 사람들의 대통령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서민적인 통합적 사고가 절실하다. 피터 드러키는 ‘리더가 지위로서 군림하는 시대는 지났다. 인간적인 매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추종자를 만들어내

촛불 집회와 리더십

의 대립이다. 대통령이 대형 토목사업과 국가 경제의 외형적 성장 가치를 지향한다면, 국민은 건강, 환경 그리고 문화라는 탈(脫)물질적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쇠고기 문제를 계기로 바다에 깔린 상층된 가치들이 한꺼번에 표면으로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 취임 시에 70%를 자랑하던 지지도가 촛불집회와 한창일 때 18%까지 떨어졌다. 한 사회에서 지배적인 가치관과 새로 부상하는 가치관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 이에 대한 해답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류하여 최상의 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낸 제도이다. ‘집회의 자유’란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IMF 때만큼이나 어려운 실정속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서민층이 날로 증

아 한다’고 했다. 국민적 갈등이 존재하고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사안에 대해 진실보다는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의 CEO 리더십은 곤란하다. 지도자는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의 논리로 풀어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관용과 포용력을 주요 덕목으로 겸비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가 다원성에 기초하는 한, 관용과 포용력은 필수요소야 아닌가. 그렇다고 사회적 질서 파괴나 불의를 용납하지는 않는 것이다.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범죄시하며 표현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를 통해 지명되는 민주주의의 기본까지도 해치 수 있기 때문이다. 관용과 포용력을 바탕으로 대통령 스스로 언급했듯, 대통령은 국민에게 ‘머슴’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번 촛불정국에서 여권과 대통령이 배워야 할 교훈이다. <여천교 교장·수필가 2006년 12월 수필상>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막강한 지방의회 의장 권한 제도적 견제장치 마련을

지난 달 서울시의회 의장 급몰 살포의 도대체 어떤 자리가길래 이런 일이 생길까. 그 단적인 이유는 지방의회 의장이 되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그에 대한 견제 장치는 허술하기 때문이다. 업무를 돕는 공무원도 무려 5명이나 되고 공식행사에서 단장장과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 상임 위 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에

게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하다. 여기에도다 국회의원 등 중앙정치 진출 발판이 되기도 한다. 한마디로 노른자위 자리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이같은 막강한 법적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또 시민의 공복임을 자처하는 지방의원들이라면 그에 걸맞는 도덕성과 청렴성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유병양·광주시 동구 소태동

無等鼓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로 시작되는 동요 ‘자전거’는 고흥 출신 천재 동요작가 목일신(1914~1986) 선생이 지난 1927년 지은 것이다. 선생은 이 때부터 주위를 놀라게 하며 ‘자전거’와 ‘자장기’ 등 주옥같은 동요 400여편을 남겼다. 고흥군은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내년부터 노래비와 동상, 상징물물 건립하고, 동요·동시대 회와 학술회의도 여는 등 선생에 대한 재조명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고흥에술화관 인근에 세워질 노래비에는 선생의 대표 동요인 ‘자전거’와 ‘누가 누가 잠잠나’가 담길 예정이다. 원래 자전거는 프랑

거가 막 삼륜차 지 몇 년 안 돼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전거가 요즘 고유가 시대를 맞아 귀한 몸이 되었다. 자동차 가격 인상 폭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자전거 값은 금값이 됐다. 통계청이 집계한 7월 중 자전거 가격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7.2%를 기록했다. 4월 19.3%, 5월 29.7%, 6월 26.2%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전거 값이 금값이 되는 동안 자동차 가격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7월 중 승용차 가격은 배기량별로 다르지만 전년 동기대비 5.1% 하락 내지 0.7% 상승에 그쳤다. 광주지역 자전거 주 소비층도 바뀌 놓았다. 지난해까지 청소년들이 주 소비층이었으나 올들어 일반인들의 구매가 급격히 늘면서 기존 6대 4의 비율이 4대 2으로 역전됐다. 고유가 시대, 자전거의 인기와 함께 목일신 선생의 현창사업도 더욱 내실있게 이뤄졌으면 싶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광주지역 자전거 주 소비층도 바뀌 놓았다. 지난해까지 청소년들이 주 소비층이었으나 올들어 일반인들의 구매가 급격히 늘면서 기존 6대 4의 비율이 4대 2으로 역전됐다. 고유가 시대, 자전거의 인기와 함께 목일신 선생의 현창사업도 더욱 내실있게 이뤄졌으면 싶다. /김우성 정치부장 wskim@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광 卍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